

시 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778호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06호 지식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08호 길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4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5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6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739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공고 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740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공고 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743호 도시관리계획(문학구획정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고 · 열람 .. 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74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1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753호 공시송달 공고(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12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81호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5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78호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5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79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7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06호

지석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장이 시행하는 지석지구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15.

인천광역시장

1. 사 업 명 : 지석지구 국가관리 방조제개보수사업
2.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지석리, 무학리 일원
3. 사업목적 : 방조제 안정성 제고, 유지관리 및 영농생활 불편 해소
4. 사업내용

구 분		총계획	‘18까지	‘19예산	‘19이후
사업비		5,722	2,700	1,512	1,510
주 요 공 사	공사비	5,096	2,337	1,423	1,335
	독마루옹벽	h=2.85m, h=1.90m, l=1,468m	h=2.85m, - l=368m	- h=1.90m, l=700m	- h=1.90m, l=400m
	식생호안블럭	l=1,468m	l=145m	l=1,323m	-
	독마루 콘크리트포장	a=7,680㎡	-	a=5,880㎡	a=1,800㎡
	인입수로 개거	l=1,499m	l=1,245m	l=254m	-
	해측 근고석보강	6,520㎥	379㎥	6,141㎥	-
	부대공	1 식	1 식	1 식	1식

5. 총사업비: 5,722백만원

6. 사업기간: 2015. 12. ~ 2020. 12. 20.

7. 사업효과: 침수피해 방지효과, 재해예방(홍수방지) 효과, 농산물 증산 효과 등

8.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장

9. 관련서류 열람(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전화 032-930-2522)

※ 도면게재 생략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308호

길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장이 시행하는 길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 10. 15.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길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일원
3. 사업목적 : 재해 사전예방 및 시설관리 개선, 안정적인 영농편의시설 제공
4.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계획	2018까지	2019예산	2020이후
< 사 업 비 >	4,652	3,169	1,483	—
계 [진도]		3,169[68%]	1,483[32%]	—
○ 공 사 비	3,962	2,577	1,385	—
○ 보 상 비	239	239	—	—
○ 시설부대경비	451	353	98	—
< 주요공사 >				
○길정저수지	-비상수문 2개소 -방수로 121m -취수탑내진보강 12.6m -수문5개소 -비상방수로 55m -L형옹벽 30m -사석쌓기 86m	-비상수문 2개소 -방수로 L=121m -비상방수로 55m	-취수탑내진보강 12.6m -수문5개소 -L형옹벽 30m -사석쌓기 86m	
○길정양수장	-송수관로 258m -토출수조 1개소 -송수개거 325m -측구수로관 40m	-송수관로L=258m -송수개거 L=325m -측구수로관 40m	-토출수조 1개소	
○ 난정저수지	-지진가속도계측기	-지진가속도계측기	-지진가속도계측기	
○ 부대공사	1식	1식	1식	

5. 총 사 업 비 : 4,652백만원
 6. 사 업 기 간 : 2017년 02월 ~ 2019년 12월
 7. 사 업 효 과 : 재해우려가 있는 취락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 사전예방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 으로 영농편의 제공
 8. 사업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장
 9. 기타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032-930-2526)에 비치
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 ※ 도면게재 생략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9-5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14.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명칭(변경 없음): 대방 디엠시티 주상복합건축물 신축공사

2. 사업주체(변경 없음)

가. 디엠개발(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72(백석동) 701-1호]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변경)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1(송도 B1BL)

나. 대지면적 : 35,765.8㎡

다. 연 면 적 : 231,797.0130㎡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 지상 43~48층 / 4개동 / 578세대

· 84A형 94세대, 84B형 94세대, 114A형 254세대, 114B형 127세대
174A형 6세대, 174B형 3세대

－ 업무시설(오피스텔): 지상 35~42층 / 3개동 / 628실

· 840A형 208실, 840B형 420실

－ 부대복리시설 :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등 13개동

마. 총사업비(변경)

－ 변경 전: 720,402,443천원

－ 변경 후: 748,607,908천원(증 28,205,465천원)

4. 사업시행기간(변경 없음) : 2019. 9. 18. ~ 2023. 6. 17.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변경 없음)

가.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739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장

○ 행정처분 사항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 소재지	법령위반 내 용	등록취소 일 자
제320236호	(주)티에스에스 최 인 홍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도로 107번길 23(항동7가)	정보통신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2019.10.1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740호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인천광역시장

○ 행정처분 사항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 소재지	법령위반 내 용	등록취소 일 자
제320187호	(주)현주엔지니어링 고근명, 이규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두리로 33, 상산빌딩 8층 802호 (계산동)	정보통신기술자 등록기준 미달	2019.10.1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743호

도시관리계획(문학구획정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고 · 열람

도시관리계획(문학구획정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16.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문학구획정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351-2 외 1
- 결정(변경) 내용
 -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용4	공공청사	인천지방 경찰청	문학동 351-2 외 1	0	증) 4,758	4,758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용4	공공청사	○ 공공청사(인천지방경찰청) 신설 - 위치: 문학동 351-2 외 1 - 면적: 4,758㎡	○ 노후된 시설의 재정비 및 향후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 공공청사 결정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기정	-	공용1 공용2 공용3	용도	지정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변경	-	공용1 공용2 공용3 <u>공용4</u>	높이	4층 이하
			형태	-
			배치	별표3의 F(*)
			색채	-
			건축선	-

*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함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문학구획정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도시균형계획과, 032-440-4633, 남동구 정각로 2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4487, 미추홀구 독정리로 95)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끝.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74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15.

인천광역시장

등록번호 (등록일자)	단체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말소일자	주관과	비 고
2008-0-인천 광역시-32 (2008.8.11.)	인천농어촌 난시청 해소 사업회	인천시 강화군 신문리 1-4	최정국	인천 농어촌지역 난시청 해소 사업 등	2019.10.11	대변인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17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제4항의 등록기준 미달 및 등록기준 미신고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처분대상업체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자	법인주소	예정된 행정처분 원인
698	(주)조동물류	이은출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33번길 10(항동7가)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19.7.31.)
549	(유)베스트트레이딩	박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98(송도동)	등록기준미신고 (신고기한:2019.7.29.)
595	(주)다승해운항공	정혜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29번길 16, 105동 606호 (용현동, 용현엑셀루타워)	등록기준미신고 (신고기한:2019.9.13.)

2. 예정된 행정처분 : 1차 위반 - 경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안허가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미달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등록기준 미신고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년 11월 6일 18:00 까지
-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1410호 해양항만과 (송도동, 미추홀타워)
- 담 당 자 : 해양항만과 이환빈 (032-440-4843)

6. 유의사항

- 서면(별지 11호 서식),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81호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1. 개정사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고충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 자체감사 시 면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의견표명 조치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안 제5조)
- 나. 면책심의회 인원수 조정(안 제7조)
- 다. 심의회 개최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 대한 방안 마련(안 제11조)
- 라. 경고 등 처분대상 범위를 타 조항과 동일하게 수정(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감사관, 전화 032-440-3132, 팩스 032-440-862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고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가.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에 대한 이행일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을 적극행정 면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9인 이내로”를 “5인 이상으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적극행정면책 신청서”를 “면책심사 신청서”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를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시 및 군·구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을 “시 및 군·구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이하 “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생략)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에 대한 이행일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을 적극행정 면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 ① (생략)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며, -----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며, -----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기관장 또는 공무원등이 「인천광역시 감사 규칙」 제18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 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기관장 또는 공무원등이 「인천광역시 감사 규칙」 제18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책심사 신청서에 적극행정 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

제11조(심의회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생략)	제11조(심의회회의 개최 및 의결)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회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다가 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며, 심의회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정에 따른 경고 등 처분대상은 시 및 군·구와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정에 따른 경고 등 처분대상은 시 및 군·구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이하 “기관”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면책심사 신청서

감사지적 사항	
구체적 판단 기준	신 청 내 용
1. 불합리한 규제개선, 업무 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소속기관 감사부서 의견

※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 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감사기구의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면책심사조서

감사기관명		감사 연월일	
건명			
신청인			
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			
감사지적 사항			
신 청 내 용	불합리한 규제개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감사부서 종합의견

[별지 제4호서식]

면책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심사 개요	일시		장소	
	안건			
	양정 (안)			
심사결과				

20 . . .

면책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간사

(서명 또는 인)

【붙임 2】

관련법령 검토 및 발체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input type="checkbox"/>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 제11조(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등)제7항 <input type="checkbox"/>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제2항 ○ 제11조(심의회의 개최 및 의결)제2항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결을 표명할 수 있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1조(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등) ⑦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에 대한 이행일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을 적극행정 면책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7조(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등)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과장급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위원장이 심의회 개최 시 마다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심의회 개최 및 의결)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며,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178호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 월 15 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통시장 등 지원계획 수립·시행 규정(안 제4조)
- 지원사업의 범위 규정 (안 제5조)
- 지원사업의 선정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 효과적 사업지원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10. 25.(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2, 팩스 032)440 - 8765, 이메일 cafeso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4. "상권활성화사업"이란 영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6. "경영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9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 공동사업, 판로촉진과 홍보, 상인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산학협력사업 등 지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전통시장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지원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육성시책 개발 및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상인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과 법 제7조에 따른 군·구의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
2. 시설현대화사업
3. 경영현대화사업
4.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및 특산물 등과 연계한 특성화 사업
5. 화재위험 점검·화재예방 환경개선 및 영 제9조의6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신청) 제5조의 사업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군수·구청장에게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구청장은 신청 받은 사업의 타당성, 예산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군수·구청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선정 및 운영) ① 시장이 사업별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단순한 사업 또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의대상 사업,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구 및 전통시장 등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전통시장 등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채사항

관계 법령	<div data-bbox="419 521 1256 57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div> <div data-bbox="438 604 1102 8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정의) ○ 제6조(시·도의 지원계획 수립) ○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div> <div data-bbox="419 925 1399 97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div> <div data-bbox="438 1010 1037 11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 제3조(상인조직) ○ 제9조의6(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div> <div data-bbox="419 1276 770 1326">□ 유통산업발전법</div> <div data-bbox="438 1359 659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정의) </div> <div data-bbox="419 1478 916 1527">□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div> <div data-bbox="438 1561 805 16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상점가의 범위) </div>
관련 법규 정비 대상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시·도의 지원계획 수립)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역 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 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숫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확장 및 수리 등
- 3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확장 및 보수 등
-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개량·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③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제3조(상인조직)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제9조의6(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①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으로 한다.

②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낼 것과 제9조의7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하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공단과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일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가입자가 첫 회의 공제료를 낸 날로 한다.

④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공제료를 공단에 내야 한다.

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시장을 우대하는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2.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이하 이 조에서 "특성업종도소매점포"라 한다)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

가.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내일 것

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다.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나목에 따른 점포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산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산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추가적인 예산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이 병 태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79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하여 일반용업종으로 적용되고 있는 ‘고시원’에 대하여 가정용으로 변경하여 수도요금 인하 및 부과 형평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원의 사용량 산정기준을 규정함(안 제31조제6항)

나. [별표 3] 업종별 가정용에 “5. 고시원”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0. 25.(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

시의회의장(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4, 팩스 440-8765, 이메일 shyys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규 조문 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고시원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 또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다른 급수 업종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개정안>

업종별구분표(제29조 관련)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1. 전용급수전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것 2.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4. 기숙사 5. <u>고시원</u>
일반용	1.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2. 사설소화전사용량, 각종 공사시 출수량, 운반급수량 또는 수도관 파손 등에 의한 누수량과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탑, 소화전등에서 급수하는 것 (사용량 × 최종단계효율)
욕탕용	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설비기준을 갖춘 목욕장업(제2호 또는 제3호의 목욕장업 제외) 2.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 안의 목욕장업 (사용량 × 최종단계효율) 3. 땀을 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찜질 전문 목욕장업 또는 24시간 영업하는 목욕장업(사용량 × 최종단계효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 ⑤ (생 략) <u><신 설></u>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고시원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 또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다른 급수 업종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u>

[붙임 1] 관계법령(발체사항)**관 련 법 령 발 체 문****□ 수 도 법****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 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1의2.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8조 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을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9조 (업종의 구분)

- ① 효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3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효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효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급·배수관에서 급수설비를 설치한 후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 (사용수량의 인정)

-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 ②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을 사용가구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으로 요금을 각각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고지한다.
-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가정용요금은 가구당 사용량으로 각각 산출하고 다른 업종의 요금과 합산하여 고지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요금조정(이하 "가구분할조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타시도 사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9조(세대분할) ① 1주택 또는 1호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하되, 세대수는 거주하는 방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다)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하며, 개별로 수돗물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공용 급수설비에도 적용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고시원 등은 사용량을 방수 또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다른 급수 업종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

⑤ 주 계량기와 호별 계량기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사용량은 호별 계량기의 평균사용량에 호당 평균공동사용량을 합산한량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한다.

[별표 1] <신설 2012.1.5.>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급수업종 구분표(제23조 관련)

업종별	구 분 내 용
가정용	가. 전용 및 공용 급수설비에 따라 주거용으로 급수하는 것 나.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 다.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라.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마.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바. 기숙사 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사회구호단체, 국가유공자단체 아. 공동주택단지내 관리사무소·경비실·공동화장실·노인정·음수대·운동시설(영업행위를 하는 운동시설 제외)등에 대한 급수 자. 전용급수 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노인복지주택과 고시원 (단, 오피스텔 제외)
욕탕용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단, 관광호텔안의 목욕장은 일반용 적용)
공공용	가. 공공시설에 대한 급수로 다음 “나”호부터 “하”호를 포함한다. 나. 소화전 및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다. 시립 및 구립 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라. 공장등록을 필한 준 공업지역내의 공장(준공업지역내 상가와 분리된 아파트형 공장 포함)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직영사업, 출연 연구기관 포함) 바. 학교(유치원포함) 사. 정당 아. 병영 자. 신문사, 방송국 차. 시장이 지정한 무료 공중이용 화장실에 대한 급수 카. 수도시설이설 등에 따른 퇴수·세척용수(단, 최종단계 요율 적용) 타. 의료기관(「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마원·안마시술소 포함) 파. 종교법인에 등록된 종교단체 하. 철도운송업 및 도시철도운송업
일반용	가.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급수 나. 임시급수,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다. 수도시설 파손 등 손괴로 인한 누수량(퇴수·세척용수 포함) 및 급수차사용량과 운반급수는 최종단계 요율 적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 김복실